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실태와 개선과제

- 2012~2013년 무기계약 전환 및 임금실태를 중심으로 -

2014년 5월

김 종 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169-9, 502(공덕동 257-3 국민서관빌딩 502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Korea Labour & Society Institute

전화: 02-393-1457 팩스: 02-393-4449

www.klsi.org www.facebook.com/ksiedit

<요 약>

- **첫째**, 공공부문 종합대책과 고용개선 발표 이후 지난 2년(2012년~2013년) 사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는 8,474명(2011년 340,636명 → 2012년 360,255명 → 2013년 351,781명) 감소했음. 반면에 이 시기 자치단체 비정규직 규모는 3,846명(2012년 60,769명 → 2013년 64,615명) 증가했음.
- **둘째**, 지방자치단체 중 광역 지자체 비정규직(2012년 9,777명 → 2013년 9,628명)은 149명 감소(직접고용 109명 감소, 간접고용 40명 감소)한 반면, 기초 지자체 비정규직(2012년 50,992명 → 2013년 54,987명)은 4,065명 증가(직접고용 4,100명 증가, 105명 감소)했음.
- **셋째**, 무기계약 전환 인원은 지난 2년 동안 53,821명으로 전체 비정규직의 15% 수준에 불과함. 공공부문 비정규직 감소 효과가 미약한 것은 무기계약 전환 제외 대상자가 약 73.8%(185,878명) 정도 되기 때문임. 전환 제외 대상 비율은 지방자치단체(84.2%, 43,064명), 교육기관(72.5%, 125,572명), 중앙 공공기관(71.5%, 32,989명), 지방 공공기관(66.6%, 8,507명), 중앙행정기관(64.6%, 13,115명) 순임.
- **넷째**,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규모는 6,038명으로 자치단체 비정규직의 10%에도 미치지 못 함. 이는 서울을 제외하고 다수의 광역 지자체에서 전환 의지가 미약하거나 기초 지자체에서 상시 지속 업무 판단 가능 직접고용 비정규직(기간제 8,397명)과 저임금 시간제(780명) 일자리가 증가했기 때문임.
- **다섯째**, 지자체 비정규직 업무와 직무 성격이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동일한 직무(5대 직군)임에도 불구하고, 고용형태별 지역별 임금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예를 들면 자치단체 기간제(광역 79만원, 기초 31만원), 시간제(광역 114만원, 기초 55만원), 용역(광역 95만원, 기초 277만원)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매우 큰 편임.
- **따라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소 방안으로 무기계약 전환 제외 대상자 전면 재검토, 상시 지속 업무의 직접고용 전환과 기준 완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취지와 직무 성격에 부합하는 비정규직 직무분석과 임금 가이드라인 방침 등의 정책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특히 정부는 물론 노동계와 시민사회진영에서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실태와 개선과제

- 2012년~2014년 무기계약 전환 및 임금 실태를 중심으로 -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I 머리말 : 문제제기

□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이행

- 지난 몇 년 간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및 실태(2011.11, 2012.1, 2013.4, 2014.4)를 발표했고, 주된 내용은 기간제 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처우개선임. 또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공공부문 각 기관별로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 및 실적을 공표했음. 게다가 정부 지침으로 용역도급 계약 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고용유지, 고용승계,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침까지 제시한 상황임.
- 이를 반영하듯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비정규직 관련 조례제정 및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했음.¹⁾ 그렇다면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비정규직 규모, 무기계약 전환 및 임금 실태는 어떤지 살펴보는 것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 고용 및 노동정책의 점검 지표가 될 것임. 특히 주요 지자체 직접고용 및 간접고용 비정규직 규모 변화 여부, 지방자치단체별 비정규직 임금 격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 무기계약 전환 이행 상황과 격차

- 이 글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실태를 확인하고자 함.
 - ✓ 첫째,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은 어느 정도이며, 무기계약 전환 실적이 평균 이하이거나 가장 미흡한 곳은 어느 곳일까?
 - ✓ 둘째,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어느 수준이며, 평균 이하이거나 가장 열악한 곳은 어느 곳일까?

1) 현재 주요 지자체 비정규직 관련 조례는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고용안정'(30개), '비정규직 센터 설립 지원'(10개), '고용 차별금지'(2개), '생활임금'(1개), '고용복지센터 설립 지원'(1개), '노동복지기금 설치 운영'(1개) 등임.

- 이 자료는 △공공부문 및 자치단체(광역, 기초)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공공부문 및 지자체(광역, 기초) 무기계약 전환 이행 실적, △공공부문 및 자치단체(광역, 기초) 비정규직 임금 실태를 중심으로 분석했음. 본 자료는 2012년과 2013년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원자료(2013.4, 2014.4)를 재분석한 것임.²⁾

II.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와 문제점 - 지자체를 중심으로

1.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공공부문 및 지자체 비정규직 규모

- 2011년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340,636명(직접고용 240,993명, 간접고용 99,643명)으로 정규직(1,350,220명) 대비 약 25.2%(직접고용 17.8%, 간접고용 7.3%) 수준이었음. 이중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은 2011년 57,775명(직접고용 47,516명, 간접고용 10,259명)으로 정규직(327,842명) 대비 약 17.6%(직접고용 14.4%, 간접고용 3.1%) 수준이었음.
- 2013년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351,781명(직접고용 239,841명, 간접고용 111,940명)으로 정규직(1,408,866명) 대비 약 24.9%(직접고용 17.0%, 간접고용 7.9%) 수준이었음. 이중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은 2013년 64,615명(직접고용 53,340명, 간접고용 11,275명)으로 정규직(313,037명) 대비 약 20.6%(직접고용 17.0%, 간접고용 17.4%) 수준이었음.
- 결국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 이후,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은 2011년 57,775명(직접고용 47,516명, 간접고용 10,259명)에서 2013년 2013년 64,615명(직접고용 53,340명, 간접고용 11,275명)으로 오히려 규모가 증가(6,840명 증가, 직접고용 5,824명 증가↑, 간접고용 1,016명 감소↓) 했음.

2) 이 글에서 다룬 공공부문 중 ‘공공기관’(중앙-지방)의 경우 2013년과 2014년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기관 통합 과정에서 변동이 있거나, 2014년 신설 기관 등 변화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곳은 제외하였음. 이런 이유로 전체 공공부문(810개) 중 분석 표본은 총 762개(중앙행정기관 41개, 광역자치단체 17개, 기초 자치단체 229개, 중앙 공공기관 280개, 지방공공기관 123개, 교육기관(교육청) 17개, 교육기관(국공립대학교) 55개)로 분석 대상을 임의 추출했으나 자치단체는 변화 없음.

[표1]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1(2016년-2011년)

구 분	2006년				2011년			
	합계	직접고용		간접고용	합계	직접고용		간접고용 (파견용역)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	
합계	1,553,674	1,242,038	246,844 (15.9)	64,792 (4.2)	1,690,856	1,350,220	240,993 (14.3)	99,643 (5.9)
중앙 행정	273,715	243,408	22,813 (8.3)	7,494 (2.7)	292,648	266,262	18,575 (6.3)	7,811 (2.7)
자치 단체	383,771	311,564	67,595 (17.6)	4,612 (1.2)	385,617	327,842	47,516 (12.3)	10,259 (2.7)
공공 (중앙)	368,384	271,655	54,614 (14.8)	42,115 (11.4)	402,338	293,085	46,971	63,378
공공 (지방)							7,924	9,827
교육 기관	527,804	415,411	101,822 (19.3)	10,571 (2.0)	610,253	463,031	125,087 (20.5)	22,153 (3.6)

주 : 2006년, 2011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원자료에서는 공공기관(중앙/지방)별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정규/비정규 수치가 조금 다를 수 있음. 2011년 공공기관(중앙 및 지방)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12.4%이며,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14.8%임.
 자료: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발표 자료(2011년 11월 28일, 관계부처 합동) 재구성

[표2]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2012년-2013년)

구 분	2012년				2013년			
	합계	직접고용		간접고용 (파견용역)	합계	직접고용		간접고용 (파견용역)
		정규직	비정규			정규직	비정규	
합계	1,754,144	1,393,889	249,614 (14.2)	110,641 (6.3)	1,760,647	1,408,866	239,841 (13.6)	111,940 (6.4)
중앙 행정	289,499	263,529	20,074 (6.9)	5,896 (2.0)	285,171	259,402	19,038 (6.7)	6,731 (2.4)
자치 단체	385,050	324,281	49,349 (12.8)	11,420 (3.0)	377,652	313,037	53,340 (14.1)	11,275 (3.0)
공공 (중앙)	387,019	276,669	49,349 (12.8)	63,379 (16.3)	391,563	279,017	47,793 (12.2)	64,753 (16.5)
공공 (지방)							45,806	46,971 (12.1)
교육 기관	629,019	483,604	125,296 (19.9)	20,119 (3.2)	644,316	511	111,017 (17.2)	21,731 (3.4)

자료: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대책 발표자료(2013년, 2014년) 재구성

□ 지자체 비정규직 규모와 유형

- 2012년 광역 지자체 비정규직(9,777명)은 직접고용 7,027명(기간제 6,129명, 시간제 534명, 기타 364명), 간접고용 2,750명(파견 41명, 용역 2,709명)이고, 기초 지자체 비정규직(50,992명)은 직접고용 42,322명(기간제 32,944명, 시간제 3,461명, 기타 917명), 간접고용 8,670명(파견 102명, 용역 8,568명)이었음.
- 2013년 광역 지자체 비정규직(9,628명)은 직접고용 6,918명(기간제 6,449명, 시간제 351명, 기타 118명), 간접고용 2,710명(파견 2명, 용역 2,708명)이고, 기초 지자체 비정규

직(54,987명)은 직접고용 46,422명(기간제 41,341명, 시간제 4,241명, 기타 840명), 간접고용 8,565명(파견 43명, 용역 8,522명)이었음.

[표3] 공공부문 직접고용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2년-2013, 단위: 명)

공공부문 하위영역	직접고용 비정규직(2012년)				직접고용 비정규직(2013년)			
	계	시간제	기간제	기타	계	시간제	기간제	기타
합계	247,651	48,608	195,174	3,869	122,651	24,338	95,760	2,553
중앙행정기관	20,053	1,825	17,419	809	6,500	581	7,012	161
지방자치단체(광역)	7,027	534	6,129	364	6,918	351	6,449	118
지방자치단체(기초)	42,322	3,461	37,944	917	46,422	4,241	41,341	840
공공기관(중앙)	45,165	11,555	32,564	1,046	33,193	4,352	29,906	891
공공기관(지방)	7,829	1,553	6,072	204	8,273	1,744	6,386	143
교육기관(교육청)	113,567	22,843	90,333	391	624	6,262	1,285	294
교육기관(국공립대학)	11,688	6,837	4,713	138	9,829	6,807	3,381	106

[표4]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2년-2013년, 단위: 명)

공공부문 하위영역	간접고용 비정규직(2012년)			간접고용 비정규직(2013년)		
	계	파견	용역	계	파견	용역
합계	109,163	8,446	100,717	81,563	8,476	73,087
중앙행정기관	5,892	26	5,866	4,323	8	4,315
지방자치단체(광역)	2,750	41	2,709	2,710	2	2,708
지방자치단체(기초)	8,670	102	8,568	8,565	43	8,522
공공기관(중앙)	62,424	7,700	54,724	52,519	7,953	44,566
공공기관(지방)	9,326	405	8,921	4,221	300	3,921
교육기관(교육청)	16,781	120	16,661	5,684	72	5,612
교육기관(국공립대학)	3,320	52	3,268	3,541	98	3,443

- 결국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 발표 이후 지난 2년 사이, **광역 지자체 비정규직**(2012년 9,777명 → 2013년 9,628명)은 149명 감소(직접고용 109명 감소↓, 간접고용 40명 감소↓)에 그쳤고, **기초 지자체 비정규직**(2012년 50,992명 → 2013년 54,987명)은 4,065명 증가(직접고용 4,100명 증가↑, 105명 감소↓)했음. 특히 기초 지자체는 정부의 무기계약 전환 취지와 상반되게, 직접고용 비정규직(기간제 8,397명, 시간제 780명)이 오히려 증가했음.

- 먼저, **광역 지자체** 중 부산(2012년 487명 → 2013년 705명), 대구 2012년 350명 → 2013년 260명), 인천(2012년 356명 → 2013년 410명), 세종(2012년 94명 → 2013년 130명), 경기(2012년 502명 → 2013년 517명), 충남(2012년 350명 → 2013년 439명), 전남(2012년 323명 → 2013년 332명) 7곳은 직접고용 비정규직이 증가한 곳임.

- 광역 지자체 중 부산(2012년 288명 → 2013년 383명), 광주(2012년 64명 → 2013년 140명), 울산(2012년 23명 → 2013년 71명), 충남(2012년 14명 → 2013년 157명), 전남(2012년 59명 → 2013년 67명) 5곳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증가한 곳임.
- 다음으로, 기초 지자체 중 서울(2012년 4,737명 → 2013년 4,862명), 부산(2012년 2,617명 → 2013년 2,841명), 인천(2012년 1,865명 → 2013년 2,221명), 대전(2012년 744명 → 2013년 833명), 울산(2012년 1,267명 → 1,317명), 경기(2012년 7,554명 → 2013년 8,410명), 충남(2012년 2,365명 → 2013년 2,649명), 전남(2012년 2,898명 → 2013년 3,453명), 경북(2012년 3,764명 → 2013년 5,219명), 경남(2012년 4,669명 → 2013년 4,884명), 제주(2012년 550명 → 2013년 805명) 10곳은 직접고용 비정규직이 증가한 곳임.
- 기초 지자체 중 서울(2012년 1,406명 → 2013년 1,608명), 대구(2012년 446명 → 2013년 498명), 대전(2012년 52명 → 2013년 71명), 경기(2012년 2,522명 → 2013년 2,700명), 강원(2012년 427명 → 2013년 540명), 전북(2012년 48명 → 2013년 251명), 전남(2012년 136명 → 2013년 251명), 경북(2012년 252명 → 2013년 293명), 제주(2012년 0명 → 2013년 3명) 9곳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증가한 곳임.

[표5] 광역 자치단체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2년-2013년, 단위: 명)

광역 단체	비정 규 총원	직접고용 비정규직(2012년)				간접고용 비정규직(2012년)			비정 규 총원	직접고용 비정규직(2013년)				간접고용 비정규직(2013년)		
		계	시간 제	기간 제	기타	계	파견	용역		계	시간 제	기간 제	기타	계	파견	용역
합계	9,777	7,027	534	6,129	364	2,750	41	2,709	9,628	6,918	351	6,449	118	2,710	2	2,708
서울	2,634	1,577	127	1,448	2	1,057	16	1,041	2,511	1,554	10	1,544	0	957	0	957
부산	775	487	74	413	0	288	1	287	1,088	705	26	679	0	383	0	383
대구	537	350	0	290	60	187	0	187	507	360	17	339	4	147	0	147
인천	687	356	22	325	9	331	21	310	654	410	116	288	6	244	0	244
광주	130	66	14	52	0	64	0	64	183	43	16	27	0	140	0	140
대전	273	160	46	114	0	113	0	113	232	119	45	74	0	113	0	113
울산	286	235	36	176	23	51	0	51	218	147	2	145	0	71	0	71
세종	94	94	1	93	0	0	0	0	130	130	23	107	0	0	0	0
경기	699	502	16	486	0	197	0	197	673	517	15	486	16	156	0	156
강원	542	505	0	399	106	37	0	37	427	414	2	412	0	13	0	13
충북	417	322	6	280	36	95	0	95	374	315	0	291	24	59	0	59
충남	364	350	0	350	0	14	0	14	596	439	3	436	0	157	0	157
전북	433	381	19	362	0	52	0	52	320	268	13	255	0	52	0	52
전남	382	323	20	303	0	59	0	59	399	332	6	326	0	67	0	67
경북	524	446	1	414	31	78	2	76	513	435	1	403	31	78	2	76
경남	615	505	73	370	62	110	1	109	566	497	6	468	23	69	0	69
제주	385	368	79	254	35	17	0	17	237	233	50	169	14	4	0	4

[표6] 기초 자치단체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2년-2013년, 단위: 명)

	비정규직 총인원	직접고용 비정규직(2012년)				간접고용 비정규직(2012년)			비정규직 총인원	직접고용 비정규직(2013년)				간접고용 비정규직(2013년)		
		계	시간제	기간제	기타	계	파견	용역		계	시간제	기간제	기타	계	파견	용역
합계	50,992	42,322	3,461	37,944	917	8,670	102	8,568	54,987	46,422	4,241	41,341	840	8,565	43	8,522
서울 기초	6,143	4,737	203	4,417	117	1,406	24	1,382	6,460	4,862	343	4,509	0	1,608	30	1,578
부산 기초	3,707	2,617	119	2,479	19	1,090	2	1,088	3,509	2,841	105	2,717	19	668	1	667
대구 기초	1,889	1,443	16	1,423	4	446	4	442	1,906	1,413	110	1,303	0	493	0	493
인천 기초	2,548	1,865	259	1,806	0	683	3	680	2,552	2,221	241	1,932	48	331	1	330
광주 기초	660	369	4	366	9	291	0	291	519	366	40	318	8	153	0	153
대전 기초	805	744	57	635	52	61	1	60	904	833	26	752	55	71	1	70
울산 기초	1,371	1,267	94	1,147	26	104	1	103	1,359	1,317	91	1,201	25	42	1	41
경기 기초	10,076	7,554	925	6,589	40	2,522	51	2,471	11,110	8,410	1,342	6,915	153	2,700	7	2,693
강원 기초	3,448	3,021	71	2,888	62	427	0	427	3,420	2,880	305	2,558	17	540	0	540
충북 기초	2,449	2,157	253	1,857	47	292	0	292	2,469	2,135	327	1,799	9	334	0	334
충남 기초	2,843	2,365	207	2,019	139	478	12	466	2,985	2,649	184	2,445	20	336	0	336
전북 기초	2,350	2,302	252	1,921	129	48	0	48	2,680	2,144	171	1,935	38	546	0	546
전남 기초	3,034	2,898	82	2,748	68	136	2	134	3,704	3,453	180	3,090	183	251	0	251
경북 기초	4,016	3,764	409	3,245	110	252	0	252	5,512	5,219	309	4,787	123	293	2	291
경남 기초	5,103	4,669	434	4,141	94	434	2	432	5,080	4,884	268	4,526	90	196	0	196
제주 기초	1,550	550	76	473	1	0	0	0	808	805	199	554	52	3	0	3

2.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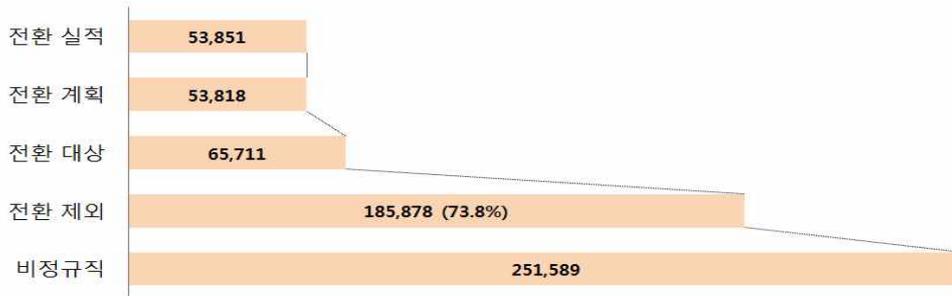
가. 공공부문 무기계약 전환 실태

□ 공공부문 및 지자체 무기계약 전환 규모

-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 규모는 53,821명(2012년 22,069명, 2013년 31,752명)으로 전체 비정규직(340,636명, 직접고용 240,993명, 간접고용 99,643명) 중 ‘직접고용 비정규직’(251,589명, 일부 지자체 제외) 전환 제외자(185,878명)를 고려하더라도 실제 전환 대상자(65,711명)의 약 81.9% 수준에 그침.
- 한편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제외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84.2%), 교육기관(72.5%), 중앙 공공기관(71.5%), 지방 공공기관(66.6%), 중앙행정기관(64.6%) 순임. 이 시기 지자체(광역시-기초)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 규모는 6,038명(2012년 2,36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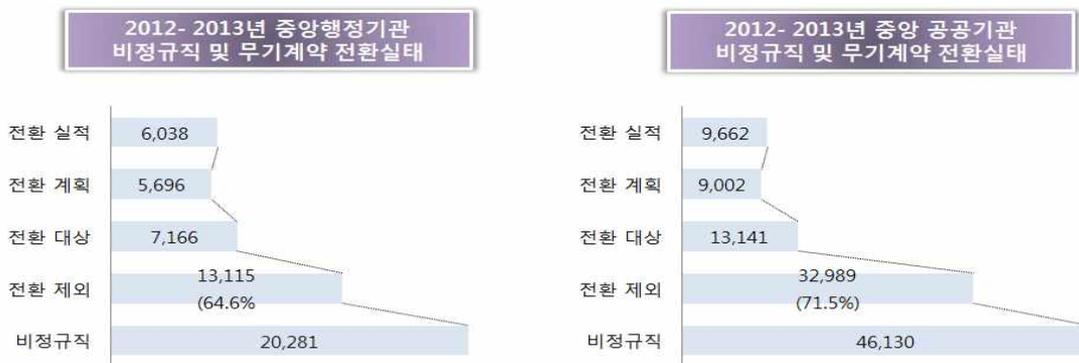
2013년 3,677명)으로 지자체 비정규직(51,099명) 중 전환 제외자(43,064명)를 고려하더라도 실제 전환 대상자(8,035명)의 약 75.1% 수준에 불과함.

[그림1]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무기계약 전환실태(2012년-2013년, 단위: 명)



* 주 : 비정규직 전환 대상 전체 규모는 정부 발표 인원 기준이므로, 간접고용은 제외된 비정규직 인원임.

[그림2] 중앙행정기관 및 중앙 공공기관 무기계약 전환실태(2012년-2013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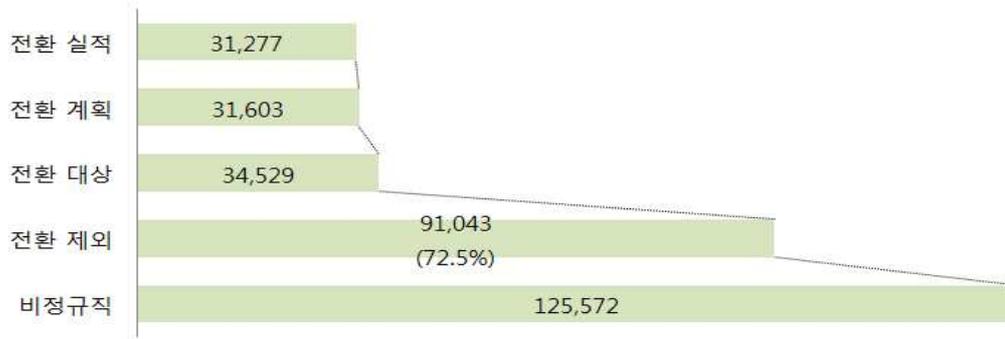
* 주 :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산하 공기업(302개)을 의미함.

[그림3] 지자체 및 지방 공공기관 비정규직과 무기계약 전환실태(2012년-2013년, 단위: 명)



* 주 : '공공기관'은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138개)을 의미함.

[그림4] 교육기관 비정규직과 무기계약 전환실태(2012년-2013년, 단위: 명)



[표7]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계획 및 실태(2012년-2015년)

구분	기관수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 현황(2012-2013)			전환시기 '12	전환시기 '13	전환시기 '14	전환시기 '15
		비정규직 근로자수	전환 제외자*	전환 대상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대상)
합계	810	251,589	185,878	65,711	22,069 (22,914)	31,782 (30,904)	(19,908)	(14,899)
중앙행정 기관	47	20,281	13,115	7,166	2,361 (3,197)	3,677 (2,499)	(3,388)	(1,279)
자치단체	246	51,099	43,064	8,035	1,772 (1,905)	2,756 (2,683)	(2,584)	(2,768)
공공기관 (중앙)	302	46,130	32,989	13,141	3,936 (3,517)	5,726 (5,485)	(4,942)	(2,714)
공공기관 (지방)	138	8,507	5,667	2,840	1,599 (1,581)	1,166 (929)	(950)	(961)
교육기관	77	125,572	91,043	34,529	12,820 (12,295)	18,457 (19,308)	(8,044)	(7,177)

주 : * 일시·간헐적 업무 종사자 및 사업완료기간이 정해진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 고령자 등 기간제법상 기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밝히고 있음(정부의 실적 비율은 각 연도별 전환계획 대비 실적을 의미함)
 자료 : 고용노동부 각 연도별 전환 계획 및 실태 발표자료 재구성

[표8]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실태(2012년-2013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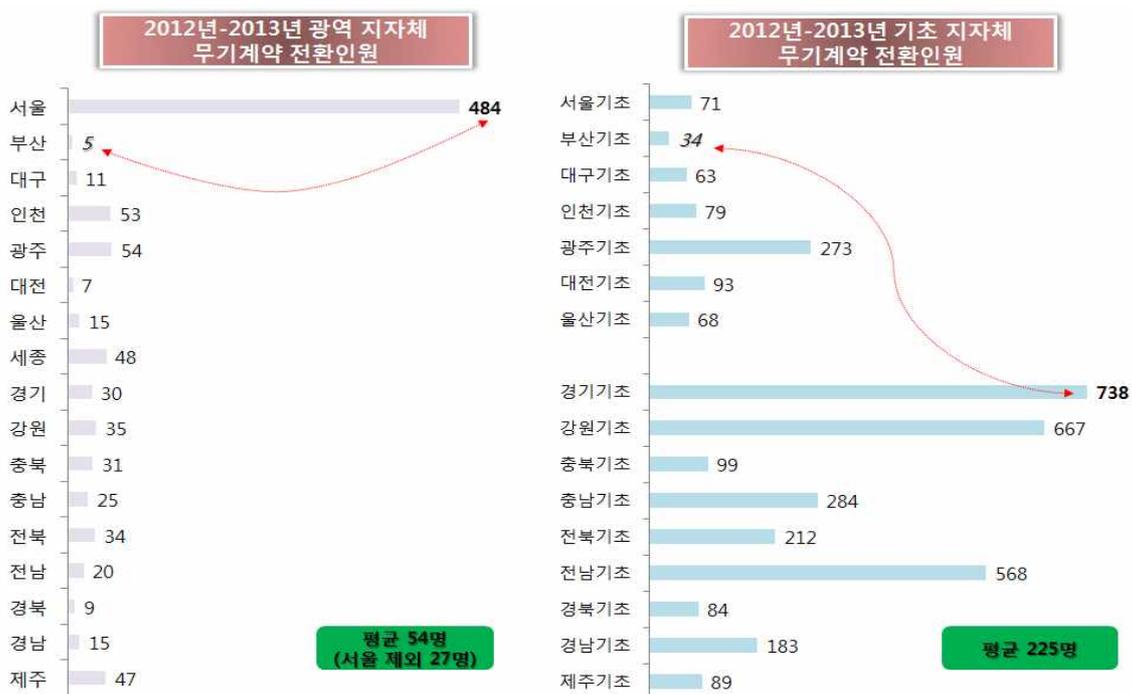
공공부문 하위영역	무기계약 전환 실적(2012년)			무기계약 전환 실적(2013년)		
	전환계획	전환실적	전환실적비율	전환계획	전환실적	전환실적비율
합계	22,571	21,696	98.6%	16,204	16,896	121.0%
중앙행정기관	3,191	2,355	89.2%	1,207	1,576	112.2%
지방자치단체(광역)	566	528	79.0%	402	395	99.4%
지방자치단체(기초)	1,339	1,244	92.6%	2,281	2,361	147.2%
공공기관(중앙)	3,599	3,150	109.4%	4,322	4,575	107.8%
공공기관(지방)	1,581	1,599	91.6%	923	1,158	116.7%
교육기관(교육청)	12,010	12,568	101.6%	6,818	6,618	101.2%
교육기관(국립대학)	285	252	103.8%	251	213	95.5%

나.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무기계약 전환 실태

□ 지자체 무기계약 전환 실태

- 먼저, 지난 2년 사이(2012년~2013년) **광역 지자체 무기계약 전환 평균 인원**은 54명이며, 서울지역을 제외할 경우 평균(27명) 이하의 무기계약 전환 지자체는 부산(5명), 대전(7명), 울산(15명), 충남(25명), 전남(20명), 경북(9명), 경남(15명) 7곳임. 광역 지자체 중 자체 전환 실적 비율에서도 충북(84%)과 경남(67%)은 가장 낮은 전환 비율임.
- 다음으로, 지난 2년 사이(2012년~2013년) **기초 지자체 무기계약 전환 평균 인원**은 255명으로, 평균 이하의 무기계약 전환 지자체는 서울(71명), 부산(34명), 대구(63명), 인천(79명), 대전(93명), 울산(68명), 충북(99명), 전북(212명), 경북(84명), 경남(183명), 제주(89명) 11곳임. **기초 지자체** 중 자체 전환 실적 비율에서도 서울(75%)은 가장 낮은 전환 비율임.

[그림5]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 전환 실적(2012년-2013년, 단위: 명)



* 주 : 1) 자치단체 무기계약 전환 실적은 해당 지자체 투출기관(지방공기업) 및 대학(시립대학교)은 제외된 현황임.
 2) 광역 지자체 중 서울 지역 무기계약 전환 실적은 은평(23명), 성동(26명) 지역을 제외하고 거의 전환하지 않았음. 서울기초 지자체 중 강동, 노원, 동대문, 동작, 마포, 중구, 서초, 성북, 영등포, 중로, 중랑구는 지난 2년 사이 전환자가 없었음.
 3) 광역 지자체 중 경기 지역 무기계약 전환실적은 수원(207명), 과천(84명), 안양(56명), 의정부(45명), 이천(43명), 의왕(31명), 안산(29명), 김포(29명), 하남(29명), 양평(18명), 연천(16명), 가평(12명)을 제외하고 모두 10명 이하 전환했음. 특히 용인과 오산, 화성은 지난 2년 사이 전환자가 없었음.

3. 지자체 비정규직 처우실태 - 임금 및 상여금

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실태

□ 공공부문 비정규직 평균 임금

- 지난 2년 사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단순 평균 임금(상여금 제외)은 직접고용 기간제 9.1만원 증가(2012년 179.6만원 → 2013년 188.7만원), 시간제 5.7만원 감소(2012년 100.5만원 → 2013년 94.8만원), 간접고용 용역 10.7만원 증가(2012년 157.5만원 → 2013년 168.2만원), 파견 2.3만원 감소(2012년 190만원 → 2013년 187.7만원)했음.
- 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실태를 보면 기간제(9.1만원 증가)와 용역(10.7만원 증가) 비정규직 임금은 시간제(5.7만원) 비정규직에 비해 약 3.4만원 정도 더 인상되었음. 이는 우리나라 현실상 동일노동 동일임금보다는 단순 노동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시간제 근로의 임금 지급형태(시급)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됨.

[표9] 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 실태(2012년-2013년, 단위: 만원)

공공부문 하위영역	직접고용 비정규직 임금								간접고용 비정규직 임금			
	기간제 임금				시간제 임금				용역임금		파견 임금	
	월급 2012	상여 2012	월급 2013	상여 2013	월급 2012	상여 2012	월급 2013	상여 2013	월급 2012	월급 2013	월급 2012	월급 2013
평균	179.6	286.7	188.7	72.3	100.5	149.5	94.8	46.9	157.5	168.2	190.0	187.7
중앙행정기관	151.0	103.7	164.1	242.3	96.9	55.2	123.3	27.3	135.2	144.9	138.5	170.0
지방자치단체(광역)	131.6	72.2	128.1	28.1	52.9		60.9	24.4	147.2	175.6	166.2	158.0
지방자치단체(기초)	127.2	182.5	129.0	44.1	72.2	113.6	65.2	52.6	173.2	180.4	168.0	147.5
공공기관(중앙)	237.9	465.8	254.5	74.1	140.0	221.2	141.0	52.1	165.1	177.6	199.1	197.9
공공기관(지방)	166.9	206.4	174.6	58.9	78.0	36.4	73.4	57.7	149.8	155.6	171.9	150.0
교육기관(교육청)	177.4	102.7	193.6	35.2	121.3	32.9	88.9	35.8	95.2	97.6	105.2	108.7
교육기관(국공립대학)	173.8	158.1	177.2	37.3	111.7	53.4	111.6	28.7	133.6	148.7	214.6	215.0

* 주 : 2013년 자치단체 복지포인트 기간제(광역 152만원, 기초 164.5만원), 시간제(광역 59만원, 109.2만원)은 제외된 것임.

나.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비정규직 임금³⁾

□ 광역 및 기초 비정규직 임금 및 격차

3) 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은 각 기관/조직에서 정부에 제출된 단순 임금을 기준으로 분석한 것이므로, 업무, 직무, 고용형태 및 근무 시간 등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다소 불안정할 수 있음을 밝힘.

- 먼저, 지난 2년 사이 **광역 지자체** 비정규직의 단순 평균 임금(상여금 제외)은 직접고용 기간제 3.5만원 감소(2012년 131.6만원 → 2013년 128.1만원), 시간제 8만원 감소(2012년 52.9만원 → 2013년 60.9만원), 간접고용 용역 19만원 증가(2012년 147.2만원 → 2013년 166.2만원), 파견 8.2만원 감소(2012년 166.2만원 → 2013년 158만원) 했음.
- 다음으로, **기초 지자체** 비정규직의 단순 평균 임금(상여금 제외)은 직접고용 기간제 1.8만원 증가(2012년 127.2만원 → 2013년 129만원), 시간제 7만원 감소(2012년 72.2만원 → 2013년 65.2만원), 간접고용 용역 7.2만원 증가(2012년 173.2만원 → 2013년 180.4만원), 파견 20.5만원 감소(2012년 168만원 → 2013년 147.5만원) 했음.
- 첫째, **광역 지자체** 비정규직 임금 실태를 보면 지난 2년 사이 기간제 비정규직 단순 월평균 임금 격차는 2012년 58만원(평균 131만원, 최대 울산 155만원 ↔ 최소 전북 97만원)에서, 2013년 격차는 79만원(평균 128만원, 최대 경기 178만원 ↔ 최소 대전 99만원)으로 임금 격차가 21만원 정도 증가했음.
- 이 시기 **광역 지자체** 직접고용 시간제 비정규직 단순 월 평균 임금 격차는 2012년 73만원(평균 53만원, 최대 전북 93만원 ↔ 최소 울산 20만원)에서, 2013년 격차는 114만원(평균 61만원, 최대 울산 127만원 ↔ 최소 대구 13만원)으로 임금 격차가 41만원 정도 증가했음.
- 둘째, **기초 지자체** 비정규직 단순 임금 실태를 보면 지난 2년 사이 기간제 비정규직 단순 월평균 임금 격차는 2012년 32만원(평균 127만원, 최대 부산 148만원 ↔ 최소 대전, 전남 116만원)에서, 2013년 격차는 31만원(평균 129만원, 최대 부산 146만원 ↔ 최소 대구, 인천 115만원)으로 임금 격차가 1만원 정도 감소했음.
- 이 시기 **기초 지자체** 시간제 비정규직 단순 월 평균 임금 격차는 2012년 68만원(평균 72만원, 최대 서울 107만원 ↔ 최소 충북 38만원)에서, 2013년 격차는 55만원(평균 65만원, 최대 제주 93만원 ↔ 최소 울산 38만원)으로 임금 격차가 30만원 정도 감소했음.
- 셋째, **광역 지자체** 간접고용 비정규직 용역 임금 격차는 2012년 103만원(평균 147만원, 최대 경북 194만원 ↔ 최소 대구 91만원)에서, 2013년 격차는 95만원(평균 175만원, 최대 광주 197만원 ↔ 최소 경남 102만원)으로 임금 격차가 8만원 감소했음.

- 이 시기 **기초 지자체** 간접고용 비정규직 용역 임금 격차는 2012년 180만원(평균 173만원, 최대 광주 300만원 ↔ 최소 대구 120만원)에서, 2013년 격차는 277만원(평균 180만원, 최대 광주 357만원 ↔ 최소 제주 80만원)으로 임금 격차가 97만원 증가했음.

Ⅲ. 맺음말 : 요약 및 함의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적 해결의지?

- 지난 2년(2012년~2013년) 사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는 8,474명(2011년 340,636명 → 2012년 360,255명 → 2013년 351,781명) 감소했음. 반면에 이 시기 자치단체 비정규직 규모는 3,846명(2012년 60,769명 → 2013년 64,615명) 증가했음. 특히 자치단체 중 **광역 지자체 비정규직**(2012년 9,777명 → 2013년 9,628명)은 149명 감소(직접고용 109명 감소↓, 간접고용 40명 감소↓)한 반면, **기초 지자체 비정규직**(2012년 50,992명 → 2013년 54,987명)은 4,065명 증가(직접고용 4,100명 증가↑, 105명 감소↓)했음.
- 무엇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감소 효과가 미약한 것은 무기계약 전환 제외 대상자가 약 73.8%(185,878명) 정도 되기 때문임. 지방자치단체(84.2%, 43,064명명), 교육기관(72.5%, 125,572명), 중앙 공공기관(71.5%, 32,989명), 지방 공공기관(66.6%, 8,507명), 중앙행정기관(64.6%, 13,115명) 순임. 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개선 과정에서 정부의 무기계약 전환 취지와 상반되게, 무기계약 전환 인원은 지난 2년 동안 53,821명으로 전체 비정규직의 15% 수준에 불과했음.
- 실제로 지난 2년 사이 자치단체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규모는 6,038명으로 자치단체 전체 비정규직의 10%에도 미치지 못했음. 이는 서울을 제외하고 일부 광역 자치단체에서 전환 의지가 미약한 곳(부산, 대전, 경북, 경남, 울산 등) 그리고 기초 자치단체에서 상시 지속 업무로 판단 가능한 직접고용 비정규직(기간제 8,397명) 그리고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시간제(780명) 일자리가 증가했기 때문임.

□ 자치단체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임금 격차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은 직접고용 기간제(2012년 179.6만원 → 2013년 188.7만원, 9.1만원 증가)와 간접고용 용역(2012년 157.5만원 → 2013년 168.2만원,

10.7만원 증가)은 다소 증가 했으나, 시간제 비정규직(2012년 100.5만원 → 2013년 94.8만원, 5.7만원 감소)은 노동시간에 비례한 임금 지급형태에 기인하여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런데 지난 2년 사이 **광역 지자체** 비정규직의 단순 평균 임금(상여금 제외)은 직접 고용 기간제(3.5만원 감소, 2013년 128.1만원)와 시간제(8만원 감소, 2013년 60.9만원), 간접고용 파견(8.2만원 감소, 2013년 158만원) 임금은 감소한 반면, 간접고용 용역(19만원 증가, 2013년 166.2만원) 임금은 증가했음. 한편 **기초 지자체** 비정규직 임금은 직접고용 기간제(1.8만원 증가 2013년 129만원)와 간접고용 용역(7.2만원 증가, 2013년 180.4만원) 임금은 증가한 반면, 직접고용 시간제(7만원 감소, 2013년 65.2만원)와 간접고용 파견(20.5만원 감소, 2013년 147.5만원) 임금은 감소했음.
- 특히 지자체 비정규직 업무와 직무 성격이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동일한 직무(5대 직군)임에도 불구하고, 고용형태별 지역별 임금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예를 들면 자치단체 기간제(광역 79만원, 기초 31만원), 시간제(광역 114만원, 기초 55만원), 용역(광역 95만원, 기초 277만원)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매우 큰 편임.

□ 자치단체 비정규직 해결 방향

- 첫째, 모범 사용자로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결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필요함. 지난 몇 년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직접고용 무기계약 전환 비율은 15% 남짓에 불과함. 이것은 상시 지속 업무에 정규직 고용 원칙 관련 규정을 일선 현장에서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 특히 공공부문 거의 대부분의 비정규직을 전환제의 대상(기간제 18가지 예외 조항과 시행령 보수적 적용)으로 약 73.8%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임. 이는 공공부문 해당 조직(부서)에서 자의적 판단과 기준(전환 절차, 채용, 평가 및 보상 등)으로 무기계약 전환 예외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요 광역 및 기초단체를 선정하여 상시 지속 업무와 성격(기준 완화), 전환 여부, 그리고 채용 점검(모니터링) 과정을 노사정 차원에서 개입하고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공공부문 중 자치단체 비정규직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 수립이 필요함. 지난 2년 사이 자치단체의 상시 지속 업무 성격이 강한 직접고용 기간제 비정규직 규모가 증가했음. 이것은 그간 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중앙 및 광역 자치단체에 사회적 관심 이 되고 있는 사이에, 기초 지자체 고용관계의 사각지대(상시 지속 판단, 이행 기

준과 점검, 채용 등)로 방치되었기 때문임. 따라서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결 우선 영역으로 자치단체(서울 제외 15개 광역, 기초 지자체)를 주요 대상으로 선정하여, 향후 무기계약 전환의 실효성 있는 대책(전환 규모와 이행 실적 대비 차기년도 교부금 반영)을 모색해야 함.

- 셋째, 공공부문 자치단체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해소방안이 수립되어야 함. 현재 주요 지자체 비정규직의 직무(사무보조, 공원녹지, 도로보수, 시설관리, 환경미화)는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럼에도 고용형태별(기간제, 시간제, 용역, 파견) 지역간 임금 격차가 매우 큰 상황임. 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취지를 반영하여 정부가 공공부문 직무분석을 통한 합리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차별개선 조치(상향 평준)를 반영하도록 해야 함. 한편 최근 지자체에도 시간제 일자리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라는 최소한의 조치가 시간제 일자리에 반영될 수 있는 정책방안(1986년 네덜란드의 시간제와 전일제 근로자 차별금지 관련 평등대우법)이 모색되어야 함.

[부록] 공공부문 및 지자체 무기계약 전환 및 임금 실태

<부표1> 지자체 무기계약 전환 실적(2012년-2013년, 단위: 명)

2011년 자치단체 총원 및 비정규		광역 지자체 무기계약 전환 실태							기초 지자체 무기계약 전환 실태						
총원	비정규 (기간제)	광역	2012년 전환			2013년 전환			기초	2012년 전환			2013년 전환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385,617	57,755 (39,802)	합계	566	528	79.0	402	395	99.3	합계	1,339	1,244	92.6	2,281	2,361	147.2
60,909	7,763 (4,753)	서울	332	325	98.0	159	159	100.0	서울 기초	170	39	55.7	47	32	75.0
23,423	4,261 (2,526)	부산	1	1	100.0	4	4	100.0	부산 기초	21	9	55.0	35	25	103.1
23,423	1,976 (1,417)	대구	3	0	0.0	11	11	100.0	대구 기초	15	24	450.0	44	39	96.3
14,851	4,137 (1,814)	인천	0	0	0.0	50	53	106.0	인천 기초	26	28	66.7	27	51	183.4
19,444	558 (453)	광주	53	53	100.0	1	1	100.0	광주 기초	34	83	283.8	185	190	103.4
9,662	1,509 (1,003)	대전	0	0	0.0	0	7	?	대전 기초	0	5		74	88	113.5
7,286	1,279 (1,223)	울산	5	5	100.0	19	10	53.0	울산 기초	0	16		48	52	108.3
-	-	세종	30	31	103.0	17	17	100.0							
61,110	10,413 (6,677)	경기	0	0	0.0	30	30	100.0	경기 기초	286	304	60.3	354	434	133.0
22,721	3,917 (2,933)	강원	30	30	100.0	5	5	100.0	강원 기초	270	238	80.1	397	429	105.1
16,122	1,959 (1,616)	충북	0	0	0.0	37	31	84.0	충북 기초	10	11	110.0	64	88	137.5
21,433	3,009 (2,420)	충남	35	16	46.0	5	9	180.0	충남 기초	82	83	99.4	297	201	95.3
21,511	2,865 (2,243)	전북	20	20	100.0	14	14	100.0	전북 기초	94	84	107.3	130	128	102.7
27,013	3,208 (2,592)	전남	4	3	75.0	17	17	100.0	전남 기초	147	152	109.7	413	416	100.7
32,524	5,111 (3,924)	경북	0	0	0.0	9	9	100.0	경북 기초	29	33	95.1	46	51	120.0
30,015	4,500 (3,572)	경남	14	3	21.0	18	12	67.0	경남 기초	101	64	54.5	103	119	126.0
8,982	1,310 (636)	제주	39	41	105.0	6	6	100.0	제주 기초	54	71	128.0	17	18	108.5

* 주 : 1) 자치단체 무기계약 전환 실적은 해당 지자체 투출기관(지방공기업) 및 대학(시립대)은 제외된 현황임.
2) 광역자치단체 굵은 글씨(서울, 인천, 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는 민주당 소속 단체장 지역임

<부표 2> 광역 자치단체 비정규직 임금 실태(2012년-2013년, 단위: 월, 만원)

	직접고용 비정규 임금								간접고용 비정규 임금			
	기간제				시간제				용역		파견	
	월급 2012	상여 2012	월급 2013	상여 2013	월급 2012	상여 2012	월급 2013	상여 2013	월급 2012	월급 2013	월급 2012	월급 2013
평균	131.6	72.2	128.1	28.1	52.9		60.9	24.4	147.2	175.6	166.2	158.0
서울	129.0		166.0		47.0		67.0		153.0	166.0	108.0	
부산	133.0		137.0		56.0		66.0		170.0	152.0	200.0	
대구	112.0		130.0	30.0			13.0		91.0	178.0		
인천	110.0		121.0	12.0	79.0		87.0	37.0	171.0	146.0	165.0	
광주	208.0	90.0	113.0		35.0		39.0		159.0	197.0		
대전	103.0	100.0	99.0	30.0	28.0		33.0		170.0	189.0		
울산	155.0		159.0	24.0	20.0		127.0	23.0	155.0	166.0		

세종	122.0		120.0	50.0	87.0		43.0					
경기	106.0	64.0	178.0	25.0	42.0		40.0		158.0	189.0		
강원	100.0	42.0	107.0	30.0			32.0	30.0	163.0	175.0		
충북	103.0		147.0		35.0				141.0	276.0		
충남	104.0		118.0				68.0		145.0	155.0		
전북	97.0	100.0	118.0	20.0	93.0		116.0	20.0	139.0	257.0		
전남	121.0		115.0	30.0	41.0		49.0	12.0	194.0	190.0		
경북	109.0		109.0		75.0		75.0		102.0	102.0	158.0	158.0
경남	115.0		114.0	30.0	74.0		64.0		134.0	125.0	200.0	
제주	113.0	37.0	126.0		29.0		55.0		110.0	147.0		

* 주 : 1) 2012년 시간제 상여금은 지급되지 않았음.
 2) 2013년 광역단체 복지포인트 기간제(152만원), 시간제(59만원)은 제외된 것임.

<부표3> 기초 자치단체 비정규직 임금 실태(2012년-2013년, 단위: 월, 만원)

기초 단체	직접고용 비정규직 임금								간접고용 비정규직 임금			
	기간제				시간제				용역		파견	
	월급 2012	상여 2012	월급 2013	상여 2013	월급 2012	상여 2012	월급 2013	상여 2013	월급 2012	월급 2013	월급 2012	월급 2013
평균	127.2	182.5	129.0	44.1	72.2	113.6	65.2	52.6	173.2	180.4	168.0	147.5
서울 기초	137.2	117.5	135.4	36.6	106.6	77.0	65.0	24.0	170.4	183.0	153.5	175.5
부산 기초	148.1	128.0	145.9		75.0		77.0	99.0	153.9	156.9	170.0	150.0
대구 기초	119.0	153.0	114.6	63.3	58.0		62.8		140.0	161.6	128.0	
인천 기초	127.5	20.0	114.6	82.0	74.0		58.4		190.6	148.0	126.5	120.0
광주 기초	143.0	133.5	128.2	30.0	66.0		50.0		300.3	356.5		
대전 기초	116.4		126.2	30.3	57.0		87.8	101.0	182.7	170.8	170.0	170.0
울산 기초	135.4	617.0	145.0	82.0	90.3		37.5		183.3	140.0	228.0	228.0
경기 기초	127.8	139.3	126.3	33.8	68.4	71.7	59.7	50.0	167.3	178.9	188.0	103.0
강원 기초	123.9	261.6	133.8	32.8	78.5		86.1	25.0	167.2	200.7		
충북 기초	125.8	29.0	129.3	43.5	38.3		55.9	30.0	213.0	206.0		
충남 기초	118.3	291.0	130.4	42.8	79.2	320.0	57.0		229.0	318.0	130.0	
전북 기초	131.1	96.1	136.6	66.0	92.0		81.8		120.2	147.2		
전남 기초	116.1	207.8	121.1	63.2	55.2	91.5	80.9	71.0	158.0	208.0	200.0	
경북 기초	119.4	165.8	118.3	43.3	43.7		50.7		159.4	164.2		125.0
경남 기초	125.1	213.3	131.1	36.0	69.4		61.5	30.0	187.0	159.0	140.0	
제주 기초	132.5	145.0	133.5	76.5	63.5		93.0			80.0		

* 주 : 2013년 기초구 복지포인트 기간제(83.9만원), 시간제(72만원)은 제외된 것임.

<부표4> 교육기관(학교-교육청) 무기계약 전환 실적 규모(2012년-2013년, 단위: 명)

교육청 (학교)	무기계약 전환 계획 및 실적(2012)			무기계약 전환 계획 및 실적(2013)		
	전환계획	전환실적	전환비율	전환계획	전환실적	전환비율
합계	12,010	12,568	101.6%	17,916	17,104	101.3%
서울교육청	2,405	2,204	92.0%	1,679	1,726	103.0%
부산교육청	383	391	102.0%	762	751	99.0%
대구교육청	357	379	106.0%	670	654	98.0%
인천교육청	864	884	102.0%	689	574	83.0%
광주교육청	282	295	105.0%	538	538	100.0%
대전교육청	249	280	112.0%	364	392	108.0%
울산교육청	251	252	100.0%	448	444	99.0%
세종교육청	49	36	73.0%	11	16	145.0%
경기교육청	2,947	2,880	98.0%	9,419	8,760	93.0%
강원교육청	1,348	2,149	159.0%	569	569	100.0%
충북교육청	556	505	91.0%	526	524	100.0%
충남교육청	564	528	94.0%	535	432	81.0%
전북교육청	282	284	101.0%	349	419	120.0%
전남교육청	404	467	116.0%	493	484	98.0%
경북교육청	461	434	94.0%	762	719	94.0%
경남교육청	574	572	100.0%	-	-	-
제주교육청	34	28	82.0%	102	102	100.0%

* 주 : 교육기관(학교) 현황자료에서 2013년 경남은 실적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계획 및 실적 없는 것으로 판단)

<부표5> 교육기관(학교-교육청) 비정규직 임금 실태(2012년-2013년, 단위: 만원)

교육기관 (교육청)	직접고용 비정규직 임금								간접고용 비정규직 임금			
	직고 기간제				직고 시간제				간고 용역		간고 파견	
	임금 2012	상여 2013	임금 2012	상여 2013	임금 2012	상여 2013	임금 2012	상여 2013	임금 2012	임금 2013	임금 2012	임금 2013
평균	177.4	102.7	193.6	35.2	121.3	32.9	88.9	35.8	95.2	97.6	105.2	108.7
서울교육청	160.0	131.0	171.0	30.0	52.0	24.0	264.0		93.0	95.0		
부산교육청	216.0	121.0	210.0	45.0	103.0	22.0	114.0		111.0	116.0	91.0	143.0
대구교육청	181.0	85.0	190.0	30.0	109.0	20.0	76.0	30.0	87.0	100.0		
인천교육청	188.0	118.0	202.0	32.0	41.0	59.0	48.0	32.0	93.0	99.0	127.0	146.0
광주교육청	167.0	100.0	162.0	32.0	81.0	53.0	47.0	32.0	87.0	87.0		
대전교육청	200.0	104.0	200.0	41.0	91.0	22.0	63.0	28.0	90.0	134.0	56.0	73.0
울산교육청	158.0	83.0	214.0	40.0	53.0	50.0	68.0	40.0	90.0	102.0		
세종교육청	177.0	97.0	200.0	46.0	57.0	20.0	56.0	40.0	100.0	73.0		
경기교육청	189.0	121.0	204.0	30.0	78.0		126.0	30.0	114.0	92.0		
강원교육청	155.0	51.0	180.0	30.0	52.0	30.0	61.0	64.0	101.0	100.0	111.0	75.0
충북교육청	194.0	75.0	202.0	29.0	62.0		85.0	30.0	98.0	90.0	91.0	87.0
충남교육청	165.0	128.0	180.0	32.0	53.0		61.0	32.0	89.0	94.0		128.0
전북교육청	160.0	99.0	179.0	40.0	65.0	30.0	71.0		98.0	111.0	155.0	
전남교육청	168.0	93.0	182.0	35.0	132.0		118.0	33.0	94.0	92.0		
경북교육청	169.0	63.0	212.0	40.0	61.0		77.0	40.0	77.0	79.0		
경남교육청	182.0	96.0	201.0	33.0	877.0	45.0	93.0	40.0	101.0	100.0		
제주교육청	186.0	181.0	203.0	34.0	95.0	20.0	84.0	30.0		96.0		

* 주 : 교육기관(학교) 현황자료에서 복지포인트(2014년 평균 기간제 147.4만원, 시간제 39.9만원)는 제외하였음.